연합노보

www.newsunion.co.kr

특보 2017.9.29 (금)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03143)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 전화398-3620~2 / 팩스398-3630 / 발행인 이주영·편집인 임화섭.김지연.김남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기자에 전화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대선배 딸... 염두에 둬 달라"
연합뉴스 경영감독 기관의 장... 이 이사장 "공평하게 써 달라 했을 뿐"

'햄버거병 어린이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던 시기에 이문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연합뉴스의 한국맥도날드 담당 기자와 부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최대 주주(지분 30.77% 보유)일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의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설립 목적 자체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명시된 기관이다.

이런 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이사장이 연합뉴스 기자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담당 기자는 확고한 직업 윤리와 원칙에 입각해 용기 있게 대응했으나, 그 과정에서 느낀 개인적 부담감은 매우 컸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께 이문호 이사장은 연합뉴스 소비자경제부의 A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이사장은 매우 온화한 말투로 A기자가 한국맥도날드를 담당하는지 확인해 본 후 불쑥 20여년 전의 얘기를 꺼냈다.

"옛날에 우리 회사(연합뉴스)에 ○○○씨라고 상무님이 계셨어. 아마 모르지 A기자는?"

이문호 이사장은 작고한 ○○○ 전 상무의 딸이 한국맥도날드 대표로 있으며, ○○○ 전 상무의 부인, 즉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모친이 부탁 전화를 해 왔다고 A기자에게 설명했다. 2004년 별세한 ○○○ 전 상무는 1994년 연합뉴스에서 퇴직했으며 그 후 모 대기업의 부사장과 회장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좀 다루어주십사" 하는 것이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모친이 이문호 이사장을 통해 연합뉴스의 담당 기자에게 전해 달라고 한 메시지였다.

이문호 이사장은 "뭐 우리가 공평하게 다루지 않을 거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옛날에 우리 회사에 계셨던 대선배니까 우리 A 기자가 염두에 두시면서 기사 쓰실 때 좀 그런 거를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그런 뜻으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말투는 시종일관 매우 정중했으나, 전화를 받는 기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이사장은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며 "(한국맥도날드 대표의 모친이) 내가 마침 지금 이사장 자리에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자기 딸이 마침 맥도날드 코리아 대표인데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런 뜻이지 특별히 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 아니야"라고 말했다. "부담 갖지 말고"라는 말도 또 덧붙였다.

A 기자는 이문호 이사장에게 "회사 선배라고 하시니까, 회사 선배면 더 이런 전화가 부담스럽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저한테까지 전화를 주신 건 부담스럽네요. 저는 부담 안 갖고, 있는 그대로 기사 쓰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26일 마포구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앞에서 '박노황 경영진 해임과 진흥회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문호 이사장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약 4분간 지속된 이 통화에 대해 A 기자는 연합뉴스 노보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또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이문호 이사장은 이 시기에 A기자뿐만 아니라 담당 부장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담당 부장은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노보가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인물들의 얘기가 모두 일치했다. 이번 통화를 포함해 이 이사장의 영향으로 연합뉴스의 햄버거병 관련 보도의 방향이나 논조가 바뀐 흔적이나 제작·편집 라인에서 지시 전달 등 관여가 있었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노조측 편집위원들은 27일 열린 편집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안건으로 올리고 사실관계를 밝힌 후 사측 편집위원들에게 논의를 요구했다.

사측 편집위원들은 "이 사안을 노사편집위원회에

4면에 계속 ☞

'무너진 편집권 독립' 인정한 박노황 사장

9월 26일 발행된 <연합뉴스 노보 특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박노황 사장이 안수훈 사회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노보에 이렇게 해명했다. "조복래 콘텐츠융합상무로부터 기사를 걸어뒀다고 보고를 받았다. 다시 생각해보고 조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안수훈 사회부장한테 직접 전화했다. 부족한 부분 얘기하고 보충해 송고하라고 했다. 내가 발행인인데 기사 발행하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란 건가?"

결국 첫 기사는 보류되다 '킬'됐고 두 번째 기사는 흐릿하게 '물타기'됐으니 박 사장의 이런 해명이 얼마나 진실인지는 차치하고라도, 그 자체로도 박 사장이 그간 강력히 부인해온 경영진의 편집 개입을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편집라인에서 기사가 나가기 전에 경영자에게 보고해 기사 송고 여부를 '상의'했으며 사장이 부장에게 그 기사의 취재·보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수사를 종결했다는 기사가 회사 경영에 얼마나 중대한 일이어서 미리 편집라인을 통해 사장에게 보고됐으며, 회사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어서 사장이 구체적인 취재 지시를 내렸다는 말일까.

박노황 경영진이 취임 이후 편집권 독립제도를 무너뜨리는 과정에 연합뉴스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항의했을 때마다 박 사장과 조복래 콘텐츠융합상무는 연합뉴스 취재·보도의 구조적 특성을 들어 경영진이 보도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 5월 노사협의회에서도 박 사장은 "편집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신이라는 게 신속하게 나가기 때문에 항상 (기사가) 나가고 나서 상황이 벌어진다. (임원은) 항의가 들어오면 보충해서 종합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 제시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박 사장의 보도 개입과 '해명'은 그동안 자신이 이른바 '중요하거나 민감한' 기사에 대해 송고 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에 대해 직접 지시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연합뉴스의 경영과 편집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특종기자는 왜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났나

툭하면 감사·경위서 요구·지방발령 협박도…기다린듯 사표수리

"17년간 연합뉴스에 다닌다는 것은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박노황 경영진이 들어오고 한순간 이 회사가 북한처럼 되어있더라구요."

2015년 10월 박노황 경영진에 사표를 던지고 나간 최선영 부국장은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린 연합뉴스에서 더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최 부국장은 2009년 '北 김정일, 3남 정은 후계자 지명' 특종으로 한국기자대상, 관훈언론상, 신문협회상, 삼성언론상, 한국여기자상을 휩쓴 기자다.

그는 "새 경영진이 오고 감사를 몇 차례나 받았는지 셀 수도 없었다"며 "언로는 막히고 공포만이 있었다"고 북한부에서 일하던 당시를 회고했다.

사장의 지시가 SNS를 통해 유출됐다며 부서원 전체가 감사를 받았고, 외부에서 당시 북한부에서 나가는 뉴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미디어전략실을 통해 보고되자 성찰은 커녕 부원들을 압박했다.

최 부국장은 "공휴근무 때 편집회의를 착각하고 못들어 간 적이 있었다"며 "당시 회의를 주재한 에디터는 징계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후 사장 주재 간부회의에서는 최 부국장 사건을 '고의적 회의 불참'으로 규정하고 감사지시를 내려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징계는 받지 않았다.

그는 "당시 권영석 부장은 회사의 결정이라며 징계를 주려고 감사를 했는데 나온 것이 없어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며 "이어 회사는 나의 태도가 불손하다면서 지방으로 발령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다.

또 당시를 회상하며 "일부에서는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기강을 잡으려고 몇몇 기자들을 시범케이스로 손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가 포함된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경영진 뿐 아니라 에디터나 부장 등 회사 간부들에 대해 깊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17년동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연합뉴스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져온 북한뉴스가 엉망이 된 현실도 최 부국장의 사표 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 부국장은 "그 당시 북한부의 북한기사는 정말 엉망이었다"며 "장용훈씨를 동북아센터로 보내고 북한부는 북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데스크로 채워지면서 오보성 기사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특히 편집 간부들은 북한사회를 흔들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북심리전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채 무조건 베끼라고 요구했다.

또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마구 써댔고 전혀 북한을 모르는 편집간부들은 아무렇게나 기사지시를 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기획기사까지 쓸 것을 요구하며 오보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기자들만의 몫이었다.

이 시기 외부의 북한 및 통일 전문가들은 북한 뉴스의 중심을 잡아주던 연합뉴스가 '찌라시'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북한부 기자들은 자괴감을 느껴야만 했다.

최 부국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측과 간부들 입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제거해야할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최 부국장은 회사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회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갈 것을 종용하고 있음을 느꼈다고도 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언론상을 휩쓴 특종기자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회사가 결정하는데는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선영 기자가 '北 김정일, 3남 정은 후계자 지명' 최초보도로 2010년 1월 27회 관훈언론상을 수상했을 때 모습.

최 부국장은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왜 편집국 간부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알 것 같았다"며 "되돌아보면 결국은 회사가 나를 내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회사는 특종기자를 내보내면서 뭐가 찜찜하긴 했던 모양이다. 경영진은 최 부국장에게 서약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마도 타사로 자리를 옮길 것이 걱정이 된 모양이다.

그는 "연합뉴스에서 내가 가진 정보로 기사를 썼으면 썼지 회사에 무슨 정보가 있다고 그런 서약서를 요구하는지 헛웃음만 나왔다"며 "퇴직 후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을 받기는 했지만 17년간 내가 있도록 해준 연합뉴스가 아닌 곳에서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후배들이 쓴 기사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며 "현 경영진과 그 밑에서 나쁜 일에 동참한 간부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연합뉴스는 남쪽에 와서 나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라고 말했다.

'대어'라던 탈북기자 '댓글부대원' 의혹…회사가 진상 밝혀야

최선영 부국장을 내보낸 경영진은 북한 전문 기자를 구했다. 특종기자를 내보내고는 그 빈자리를 메울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

2016년 초 국가정보원 등에 의뢰해 탈북민을 모아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했지만 적임자를 찾아내지 못했고 경력기자 공채를 하면서 북한전문기자를 뽑으려고도 했지만 역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정재용 통일외교부장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탈북민의 소개를 의뢰했고 K씨를 추천받았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전문 기자를 뽑는 과정은 전혀 치밀하다고 할 수 없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하고 조선중앙통신 원문을 주며 기사화하고 간단한 논술을 쓰도록 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의 글쓰기를 본 당시 편집간부는 '대어' '물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곧장 경영진에 보고가 이뤄졌고 그는 채용됐다.

하지만 K씨는 기사 작성 등 업무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끝에 올해 8월 계약 연장이 불발해 퇴사했다.

그리고 얼마후 뜻밖의 보도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 "검찰은 NK지식인연대 출신 P씨와 K씨를 각각 댓글 작업을 위한 외곽팀장과 팀원으로 파악하고 P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북한 인민군 중좌 출신의 K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로 북한 관련 기사들을 써오다가 지난달 3일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NK지식인연대를 활용해 탈북자들을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가 탈북자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NK지식인연대는 이 매체에 '국정원 댓글부대' 연루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은 매서웠다. 당장 "연합뉴스 기자들을 다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고 SNS에서도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 지위를 문제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노황 경영진 아래에서 연합뉴스 기자들이 또 다시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다.

이 일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회사가 의혹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탈북민을 북한 전문 기자로 채용할 때 최소한의 검증은 기본이다. 회사는 K씨를 채용하면서 합리적인 절차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는가.

국기게양식을 하고 현충원 참배를 자랑스럽게 했던 경영진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태식 해고를 정당화하라' 증거 짜맞추기

"우리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적으로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회사 명예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경영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폐가 되는 사람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태식 조합원 해고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패한 박노황 사장이 지난 4월 24일 노사상견례에서 한 말이다. 그는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김 조합원을 절대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이 꿈은 대법원이 7월 11일 최종판결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깨지고 말았다.

회사가 내건 해고 사유는 ▲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 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 명령 위반 ▲ 업무 중 사적 SNS 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 부적절한 언행 ▲ 직무 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이다. 법원이 유일하게 인정한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언행'뿐이다.

재판 기록에는 회사가 김 조합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증거 만들기에 주력했음이 곳곳에 드러난다.

회사 측 소송대리인은 김 조합원이 전국부 발령을 받은 때부터 가족돌봄 휴직이 끝날 때까지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에 모든 탑승기록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등 역사·문화재 관련 기관 30여 곳에는 김 조합원이 한 모든 강연의 날짜와 시간, 강의료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기록에는 또 회사가 간부들을 동원해 김 조합원을 문제사원으로 만들려 애쓴 모습도 보인다.

정천기 미래전략실 부실장은 A4용지 2장이 넘는 사실확인서에서 김 조합원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근태가 매우 불량하며 데스크가 제어하기 어려운 사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태식의 근태 불량은 부원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태식의 경우 오랜 기간 한 부서에서 문화재만 담당하다 보니 긴장도가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점도 있으나, 개인적 캐릭터가 조직생활에 동화하는 편이 아니어서 돌출 언행이 잦고 데스크의 지시사항도 자주 묵살하는 등 평소 문제가 많았습니다."라는 식이다.

정천기 부실장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시점에 그때 왜 그런 사실확인서를 썼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기조실 소속부장으로 '진술이 필요하다'는 회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섭 에디터도 인사교육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평일 보조데스크 당번 근무 때 근무인 사실을 잊고 제때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 김 조합원이 근태문제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 에디터는 "당시 인사부장이 현·전임 문화부장들에게 김 부장 근태에 대해 써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공식 요청으로 알고 기억나는 것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모두 미리 조사돼 징계 사유의 증거가 됐어야할 것들이지만 회사는 해고부터 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뒤늦게 증거를 만들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조합원을 문제사원으로 만들려는 회사 측의 이런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제시한 각종 자료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징계 당시 구체적으로 원고의 위반행위를 특정하지도 못한 이상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뒤늦게 만들어낸 짜맞추기식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노황 경영진은 김 조합원 해고와 관련 소송으로 회사에 큰 피해를 줬다. 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이제라도 그 과정에서 경영진이 벌인 해사행위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해야 한다.

김태식을 가만 두지 않겠다던 교수 출신 장관은 누구인가?

나는 해고됐다. 그리고 복직했다. 해고 무효확인 소송 1, 2심에서 모두 이기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지난 5월 26일, 우리 노동조합 '사원커뮤니티'에다가 나는 실명으로 "복직은 법원의 결정이지 박노황의 은사품이 아니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하마터면 내가 거짓말할 뻔했다. "사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고 복직시키기로 했다"는 사측 연락을 받고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에 따라 나는 돌아가고픈 마음이 나는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통보가 있은 바로 다음날 오전, 내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소 취하고 뭐고, 방금 대법원 확정 판결났는데요? 이겼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돌아왔다.

그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전국부에서 '근신' 중이다. "원고는 1993. 1. 1. 피고에 입사하여 1998. 11. 경부터 17년 가까이 문화부 기자로만 재직하였는데(갑 제1호증), 한 부서에 이처럼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두드러졌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문화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문화계 인사들과 분쟁이 잦았으며, 저속한 표현과 비속어 등을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문화부 소속 다른 기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다른 부서로 옮겨 근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5. 7.1. 원고를 전국부로 인사 발령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피고 연합뉴스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2016년 11월 30일 '준비서면(1)'에서 이렇다고 말했다. 전국부가 근신 부서라는 금시초문을 나는 이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전국부 근무 요원 130명가량은 전부 근신 중인가 보다.

3개월간의 휴직 종료를 앞둔 2015년 11월 초순,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력한 문화계 인사가 불러 그가 있는 그 지방으로 갔다. 그가 운영하는 신문을 날더러 맡아줬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한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내가 해고된 줄로 알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궁금했는데, 이내 그 의문은 풀렸다. 그는 그 즈음 정치권 소위 친박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현직 장관인 A 얘기를 꺼냈다. "A를 얼마 전에 내가 만났더니 당신 얘기를 하더라. 당신 가만 안 두겠다더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해고된 줄 알고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가 운영하는 신문을 실직자인 나에게 맡기려 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직후, 복직에 즈음해 사측에 의한 해고 협박이 가속화했다. 이 와중에 노조 위원장과 만난 조복래 상무는 나에 대한 협박의 정당성을 홍보하다가 "교수 출신 모 장관이 김태식을 왜 계속 저 자리에 두느냐"라고 따진 일이 있음을 들었다. 해고를 결정한 2015년 11월 23일 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장관이 다시 등장한다. 이 자리에서 조복래 상무가 한 말이다. "장관급 교수 출신, 같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시던 분도 김 부장의 언행에



대하여 굉장히 분개하였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고 전달되었다."

물론 나를 해고로 몰아간 모든 원인이 이 친박 출신 장관으로 귀결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로 이 경영진이 허술하다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떳떳이 밝혀야 한다. "김태식을 왜 저 자리에 두느냐"고 경영진에게 따진 교수 출신 장관이 누구인지 경영진은 이제 밝혀야 한다. 나아가 그가 따졌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실명과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는가?

김태식 조합원

'사장 퇴진시키기 좋은 날'

… 짧고 강렬했던 집중투쟁일



이주영 지부장이 이문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게 경영진 해임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진흥회 이사회를 전후로 이홍기 전무가 입장하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경영진 퇴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과 언론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경영진 해임 촉구 집회·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와 대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어 퇴진 투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모여 보고대회·토론회에서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로세우기' 집중투쟁 '박 사장 퇴진' 대동단결

연합뉴스 바로세우기를 위한 노조원들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졌다.

연합뉴스노조와 연합뉴스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월 26일 '집중투쟁의 날'을 맞아 박노황 경영진의 횡포로 위기에 빠진 소중한 일터 연합뉴스를 살리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다.

오전 비대위 대표단이 마포구 공덕동 태영빌딩에 있는 뉴스통신진흥회를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집중투쟁의 막이 올랐다.

비대위 대표단은 연합뉴스 경영 관리·감독권과 대표이사 추천권을 가진 뉴스통신진흥회의 사무실에서 이문호 이사장을 만나 진흥회가 연합뉴스의 독립성·공정성을 위해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책무를 저버린 데 항의하고 박노황 경영진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소중한 연가까지 사용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후 진흥회 사무실 밖과 건물 앞에서 '진흥회는 박노황 경영진을 해임하라', '이사진은 동반 사퇴하라', '언론자유·편집권독립 쟁취하자', '박노황은 물러가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어 정오께 비대위원·대의원·조합원은 물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노황 사장 해임 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제4기 뉴스통신진흥회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현 이사진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린 박노황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공정보도를 훼손하고 공영언론의 가치를 짓밟은 박 사장과 경영진을 해임하고 진흥회 이사진도 책임을 함께 지고 동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회사로 자리를 옮겨 비대위·대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경영진 퇴진 투쟁 현황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향후 투쟁방향 등을 논의하는 조합원 투쟁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임화섭 공정보도위원회 간사의 박노황 경영진 전횡 및 편집권독립 훼손 경과 보고, 양정우 지배구조개선특위 간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 설명, 권영전 쟁의부장의 퇴진 투쟁 당위성 소개에 이어 조합원들의 자유발언과 토론이 진행됐다

조합원들은 3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피로도 잊은 채 회사의 위기에 대한 절절한 고민과 바로세우기를 위한 열성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주영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이뤄낼 사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박 사장 퇴진"이라며 "10월 한 달 퇴진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1면에 이어

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회사는 외부 민원이 있더라도 이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치우침없이 기사가 제작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문호 이사장은 연합뉴스 노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떻게 써 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공평하게 써 달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옛 직장 선배 부인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한 것일 뿐이며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문호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진지하게 믿는 것으로 들렸다.

그러나 압력성 청탁 전화가 노골적인 지시를 담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는 것이 상식이다. "친절하게 대해 달라", "얘기를 잘 들어 달라"는 은근한 압력이 훨씬 흔하며, 부정 청탁으로 사법처리되는 수사기관 전현직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도 대개는 "알아서 소신 있게 하되, 친절하게 해 달라"는 식이다. 전화를 건 사람의 배경과 지위를 고려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를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하면, 이문호 이사장의 행동은 명백히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이 이사장의 주관적 믿음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옛 인연을 거론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기사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사고로는 연합뉴스의 미래는 없다.